


#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

— 국회정책 세미나 —

▶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10:00 ~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심재철 의원, **KILD** 자유민주연구원

▮ 주관 : 국회 자유포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

## - 국회정책 세미나 -

- 일 시 : 2019년 9월 9일(화) 10:00 ~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관 : 심재철 의원, 자유민주연구원
- 주 최 : 국회 자유포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개 회 식 (10:00-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의례</li><li>▸ 인사말(심재철 의원)</li><li>▸ 축 사(나경원 원내대표)</li><li>▸ 내빈 소개 및 기념촬영</li></ul>	
발 제 (10:20-11:20)	발제 1	평양공동선언 1년 남북관계 평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발제 2	평양공동선언 1년 안보상황 평가 신원식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
	발제 3	평양공동선언 1년 국내상황 평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사회
종합토론 (11:20-11:50)	참석 의원 및 청중	





# Contents

## 인사말 및 감사

1

- 심 재 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나 경 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발제문 1

### 평양공동선언 1년 남북관계 평가

5

- 김 천 식 : 전 통일부 차관

## 발제문 2

### 평양공동선언 1년 안보상황 평가

23

- 신 원 식 :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

## 발제문 3

### 평양공동선언 1년 국내상황 평가

37

- 유 동 열 :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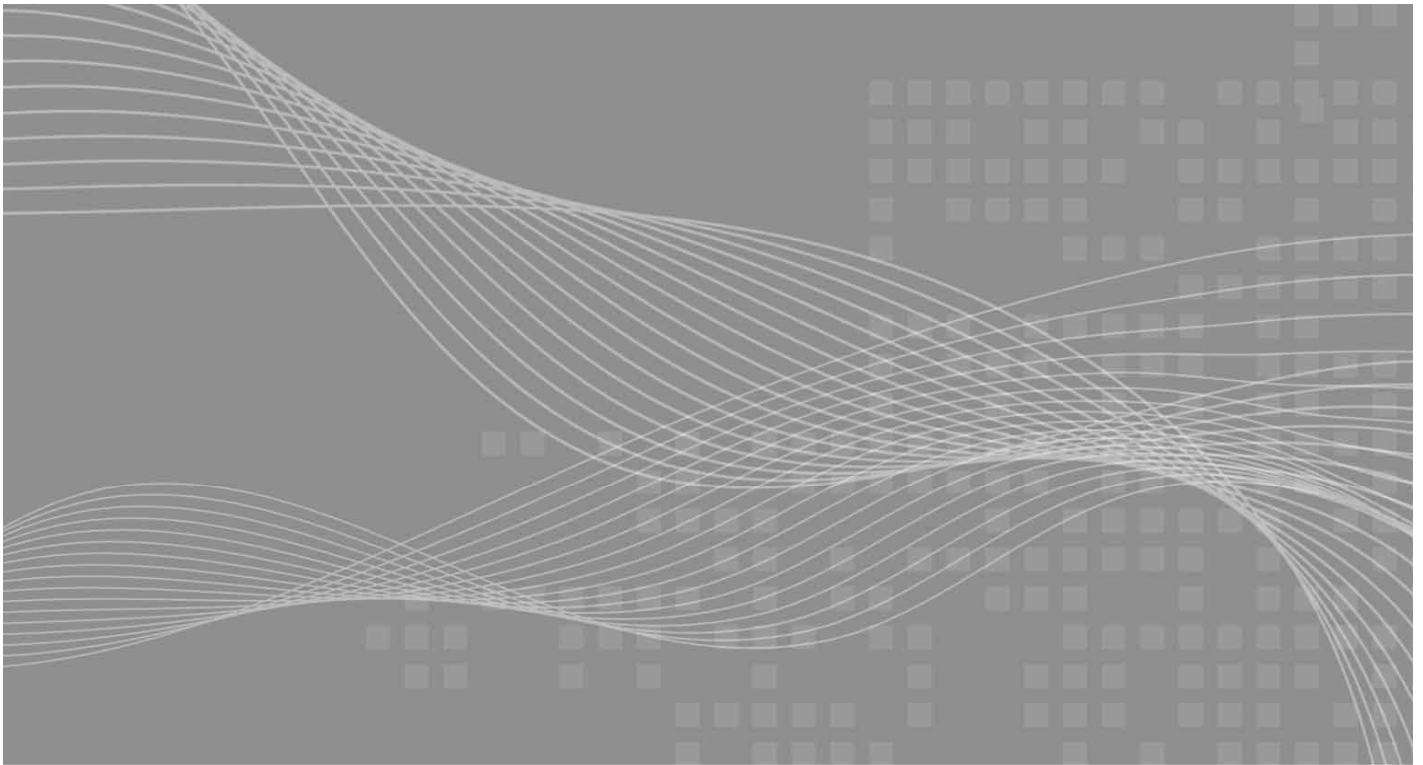
57

- 부록 1. 평양공동선언 (2018.9.19)
- 부록 2. 판문점선언 (2018.4.27)

## · 자유민주연구원 소개

67





# 인사말 및 축사

■ 심 재 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나 경 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재철입니다.

먼저 오늘 정책세미나의 발제를 맡아주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신원식 전 합참차장님,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문에 서명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9.19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교류와 협력 확대를 한다면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5가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9.19 합의는 북한의 휴전선일대 동향을 정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였습니다. 안보의 핵심인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를 해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들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다름아닌 주한미군의 철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짝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한밖에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연합을 강화하며 한일 무역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이성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2018 평양공동선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유우파의 알찬 정책세미나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회정책 세미나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심재철 의원님과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선언 당시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은 실체적 평화가 없는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를 허물어뜨리는 합의서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 또한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박수치며 자화자찬하는 오만한 행태였습니다. 그 후 1년,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보는 무너지고, 안보를 뒷받침하는 외교는 참사 수준입니다.

북한은 연일 우리나라를 향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막말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굳건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도, 경제도 우리민족끼리’라며 북한을 대변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굳건한 안보를 통해서만이 우리나라의 실체적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 동안의 남북관계와 국내, 안보상황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외교 실패, 남북관계의 실상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9.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 경 원

발제문 1

# 평양공동선언 1년 남북관계 평가

Ⅰ 김 천 식 Ⅰ  
(전 통일부 차관)





## 발제문 1

# 9.19 평양공동선언 1년, 남북한 관계 평가

1

## 9.19 평양선언의 주요 내용

- 1) 한반도전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 2)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
  - 금년내(2018)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
- 3) 인도적 협력을 강화
  -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
  -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 4)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
  -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
- 5) 미국이 6.12 성명의 정신(미북 간 새로운 관계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 6)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2018년)로 서울을 방문

## 〈4.27 판문점 선언〉

### □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 ① 민족 자주, 기존 합의 철저히 이행 ②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대화
-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④ 각계각층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 ⑤ 이산가족상봉 ⑥ 10.4선언합의 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 위험 해소

- 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우발적 충돌 방지,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개최

###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① 무력불사용, 불가침 합의 준수 ②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으로 군축
- ③ 올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4자회담 개최
- ④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 2

## 9.19 평양선언 1년 평가

### 1) 총평

-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고,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악화되었으며, 남북간의 불신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선언을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한 것이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전쟁상태를 종료하는데서 나아가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것이며,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고 조속히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2018.9.20. 대국민보고).

정부는 지금도 9.19 평양선언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대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에는 반박하지 않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희망하는 언급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조성된 극도의 군사적 위기가 조성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면 위기를 가라앉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에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미북 간 대화가 열리고 활성화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다. 그러나 2019년 들어와 북한이 핵포기와 관련한 행동이 없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을 중심에 놓고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미·중·일과의 관계가 모두 순탄치 않고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어려워 졌다.

- 김정은은 금년(2019) 초까지만 해도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 4.27선언과 9.19선언에 대해 큰 의의를 부여했으며, 남북관계에 만족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것이 북한의 역사적 숙원이었던 미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CVID를 배격하고 북한의 주장을 관철시켜 6.12 싱가포르성명을 채택했다.

- 군사부문에서는 북한의 오랜 요구를 일거에 성취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별 대가없이 중단시킨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 수십년 간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도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북한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중단,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합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큰 성과

를 거두었다.

- 김정은은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9.19군사합의서를 남북 간의 무력 행사를 종식시킨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써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 남북한이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합의하고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제재를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만족이었다.
- 그래서 김정은은 지난해(2018)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2019년에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자,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미북관계도 남북관계와 같이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결단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2018년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는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전략자산 전개 및 도입 중지,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 추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2.28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다.
-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2.28 김정은의 제안은 9월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를 신뢰하면서 이것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전혀 다른 빅딜 제안을 받아 들고 당황했을 것이다. 미국은 영변핵시설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영변 밖의 우라늄 농축시설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의 기준으로 주장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선언 이후 유류순방 기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해제를 호소했지만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CVID의 국제 공감대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2019. 4.10)에서 미국의 빅딜 제안을 변경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없는 한 제재는 계속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남북경협의 추진에 대한 양해도 구하지 못했다.

- 김정은은 2.28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세계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데 대한 불평과 유감도 컸을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제의에 일체 반응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아예 만나지 않겠다고 일축하고 미북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심한 비난을 하고 있다.
-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했던 해법이 미국에 의해 거부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했던 대남 요구사항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철도도로 현 대화 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 반입중단, 평화체제 협상, 2018년 종전선언 등
- 9.19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하고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으나 이것도 기본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하기로 한다”(9.19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비행 제한 등 조치에 합의했다. 이는 남북간 군대의 분리를 통한 충돌 방지의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불균형적으로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나아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우리 군의 첨단장비 도입이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시비하며, 우리의 군사문제에 간섭하고 대비태세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하며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임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서를 근거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분야 합의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조가 잘못됐다.

-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긴장 완화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없는 남한을 상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 4월 이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2019.4.12.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남조선 당국자는 아무리 비위에 거슬려도 평양발 경고(최신무기 반입, 군사연습 중단)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7.26 김정은)

## 2) 남북관계의 현황

- 남북간에는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 등이 없으며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도 사실상 기능정지상태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거의 없다.  
북한의 핵폐기는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이 남북관계에 들어와 작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정권의 성격을 불문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다.
-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정치적 존중이나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핵무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대단히 고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큰 바보'(수준이) 바닥' 겁먹은 개' 수준으로 경멸한다. 북한은 심정적으로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불평등관계로 고착시키고자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하며, 천금 같은 대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8.19)고 남북관계를 살리고자 하나, 북한은 앞으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지 남북대화는 없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공언하는 등 대화에 호응할 기미가 없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분위기 조성, 평화경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의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이를 태산명동 서일필,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 세계 웃기는 사람 등으로 조롱한다.(외무성, 조평통 등)

쌀 5만톤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했다.(중국이 식량 100만톤 지원, 관광객 500만명 지원 등 보도)

-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의 전략적 문제에 관한 외교권을 대표하고자 한다. 즉,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할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거나 끼어들지 말고 빠지라고 공박한다. 문대통령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 여론화하여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고 비하한다(외무성).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남한은 끼어들어봐야 할 일도 없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 상대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한다(7.12, 우리민족끼리). 북한은 핵무장으로 그들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하며(7.8 노동신문 등), 핵무기를 지렛대로 남한을 중요한 한반도 외교 현안 협의에서 배제하려 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문대통령을 들러리 세워놓고 미북 정상만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은 북한의 남한 배제 의도가 관철됐다고 보이며, 매우 좋지 않은 징조이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무시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와 남북간 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결국 미국과 담판하여 모든 것은 타결하고 남북관계는 그 종속 변수로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스킨십과 소통 채널의 자신감, 그리고 한미관계의 소원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6.30판문점 회동은 북한의 그러한 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작금에 주변 4강이 남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외교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더 실질적이고 파괴적이다.

작년 9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문대통령은 종전선언, 김정은은 불가침 선언이라고 했으나 남북한 관계는 그러한 근본적 개선이 없다. 반대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북한은 5월 이후 지금까지 남한만을 겨냥하는 단거리 미사일 및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를 9차례 실시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며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협박한다.

미국(트럼프, 폼페이오, 볼튼)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을 동맹국이 용인한 것은 이상하고 위험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근거로 우리의 군사문제를 사사건건 시비함으로써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를 제약하고 약화시키고자 한다. 한미군사훈련(키 리졸브, 독수리, UFG, 맥스썬더 등)은 중단됐다.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되지 않는다.

-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데 한미동맹은 신뢰성이 많이 저하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간의 입장차이는 한미동맹에 좋을 것이 없는 일이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과 우려,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 동북아의 안보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 북한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을 끝내라고 선동하고 있다(9.2 우리 민족끼리)

### 3)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원인

#### □ 포용정책 추진 환경의 소멸

- 4.27판문점 선언이나 9.19평양선언은 기본적으로 1990년 탈냉전이후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 선언의 내용도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의 합의와 유사한 것을 되풀이한 것이다.
-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한 것을 잘 실천했다면 핵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었으나 실천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 이행이 안 된 이유를 이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핵문제는 더 악화됐고 남북관계는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
- 탈냉전 이후 남북대화 30여년을 회고해 보면 남북한 간에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볼 때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 낸다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좌절된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의나 포용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 그 이유는 포용정책의 전제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바탕에서 우월한 국력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인데 전제가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와는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4.27/9.19 정상회담 이후 실제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한 관계가 냉랭한 것은 이러한 정세의 구조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일과성으로 볼 수 없다.
- 현 한반도 정세의 핵심요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더 근본적인 것은 주변 질서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실패

- 남북정상회담의 성패의 평가 기준은 북한의 핵문제이나, 현재로서는 미달이다.
- 과거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남북관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재는 것이었고, 그 지표는 남북한 간 접촉과 경제 교류협력의 실적이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이것이 타당한 기준이었으나, 핵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선 상황에서는 그러한 지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됐다.
-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2018년 3월 5일 김정은은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관문점과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했으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정상회담을 지지했다고 할 것이다.
- 정부가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를 보면 북

핵문제 해결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더 확장되고 있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사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북한의 핵위협은 역대 최악이 됐다.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 2.28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했다.  
미북 간에는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상호 새로운 관계수립(정상화), 평화체제, 핵문제 해결을 합의했으나 그 이후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의미 있는 진전도 보지 못했다.
- 2019년 2.28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확인하고 회담의 결렬을 택했다. 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첫마디는 “북한은 핵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였다.
- 북한이 핵보유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핵보유국임을 규정했고, 2017년 11월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으며,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핵군축과 핵선제 불사용, 핵비확산을 북한의 핵정책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정책이다. 북한은 수차례 대내외에 핵무기는 인민의 피의 대가로 얻은 전취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핵무력은 전쟁억제력이며,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이며, 통일을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선전해 왔다. 핵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 비핵화 개념에 대해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헛갈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스스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동안 남북한 간, 미북 간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공감대가 없었다.
- 북한은 그들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2.28 하노이 미북회담이 끝난 이후 북

한의 이용호 외상은“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재해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미국이 부담스러워할 군사적 조치란 아시아 전력 배치 등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주한미군 등 한국의 안보에는 치명적 손상을 주는 일일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28 하노이에서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북한에 제시했다. 로이터나 마이니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며, 모든 핵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하며, 핵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과 사찰 검증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요구는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며 강도적 요구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짜 비핵화에 만족하자는 주장이나 같다.
-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의 개념도 완전한 비핵화이다. 즉 남한과 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한은 이를 단 하나의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이행했으며, 국제사찰까지 완벽하게 받고 있다. 북한도 이를 남한과 똑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정으로 비핵화하겠다고 결단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19.4.12.)을 통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게 빅딜 제안을 폐기하고 종말 단계가 무엇인지도 불확실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단계적 해결방안에 호응하라는 것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은 6.30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동의 의미를 북미간에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중

식과 새로운 평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7.1). 판문점 회동후 2~3주내에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아무 진전이 없다. 북한은 연이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8월 31일에는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최섉희 외무성 제1부상)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할 듯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0년의 핵협상 과정을 회고해 볼 때 앞으로 실무회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정세의 근본적 변화: 신냉전

-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질서가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으로 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을 받게 됐다.
-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 협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핵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문제이지 남북 간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을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
- 북핵문제를 다루는 미북회담에서는 필연적으로 안보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괌과 하와이 등 태평양상의 미국의 전략자산을 제거하고, 미북 간의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B2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 가능한 미국 내의 무기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A.Kim) 이는 미국의 아태지역 핵우산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실현불가능한 요구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갈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우산 철폐는 북한이 1985년부터 주장했던 것이며 1991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제기했던 것으로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중국이 말하고 있는 쌍궤병행과 맥락이 같은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사항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전후에 시진핑과 회담하였으며, 시진핑은 6월 20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주한미군, 전략무기 배치, 관계개선...)를 북한과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동북아 질서변경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미국은 그것들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볼 것이다. 중국도 그 문제들을 미북간에 타결하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회담에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패권경쟁의 한 구성요소로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 정세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 3

## 대북정책 제언

## 1) 환경의 변화

-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핵무장국가이며 스스로는 한반도의 주인국가로서 행동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힘을 지렛대로 남한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약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것이다.
-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신냉전시대이며, 한반도는 미중간 첨예한 이익경계선이다. 이러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함으로써 안보를 지키고 통일의 기회를 잡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 2) 정책우선순위의 조정

- One Korea 원칙을 분명히 하며,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류를 실시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통일의 목표는 확고하게 견지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당국간 협의에 의한 교류가 어려우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인적 교류와 정보교류, 방송개방 등은 적극 추진한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현실을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우월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정세판단과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추구하면 100% 실패한다.
-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세계질서가 크게 흔들릴 때에 우리는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변화에 치이고 휘둘리는 것보다 낫다. 기본 방향은 우리가 승자연합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뿐 아니라 통일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추후 패권질서가 형성되는 대로 순응하겠다는 기회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위기를 피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다. 어정쩡한 태도는 화를 부를 수 있다.

### 3) 안보태세의 강화

- 남북한 간 군사균형이 파괴된 상황에서는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국가와 국민과 군대가 전쟁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힘으로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단호함과 결기를 유지해야 한다. 굴종적 평화를 배격하는 국민정신을 형성한다.
-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이나 이웃 나라의 침략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격상한다.

### 4) 북한의 비핵화

-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국제체제에서 이탈하여 생긴 문제이다. 직접적으로는 NPT 체제에서 이탈 한 것이고, 크게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협력 체제에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북한도 탈냉전 초기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핵개발로 매진함으로써 국제체제에서 탈락하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기, 경제난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북한은 비핵화하고 국제체제에 동참해야 한다. 비핵화 없이는 국제체제에 동참할 수 없다.

- 빅딜 제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으로서 일부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단계적 접근, Small Deal부터 하자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단계적 접근법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에는 하나 실제로는 단계마다 제시하는 쌍방의 조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무한정 지체된다.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도 완성을 못하고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종착지가 어디인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허술한 해법이다. 그리고 단계적 해법의 치명적 약점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단계적 해법은 현실적으로 핵군축 회담이 될 소지가 크다. 북한은 그러한 접근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해법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상하다.
- 핵을 가지고 있어도 대외관계에서 불편이 없고 경제도 괜찮다면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체제 존망의 경계를 오가며, 인민들이 굶어죽어도 핵을 개발했다. 신뢰구축을 통한 핵포기는 국가권력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성립하기 힘든 해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은 완전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북관계의 완전 정상화, 불가침 보장, 대규모 경제지원 등 일괄타결 동시조치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리스트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핵 개발 현황을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문 2

# 평양공동선언 1년 안보상황 평가

Ⅰ 신 원 식 Ⅰ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





## 평양 공동선언(9.19선언) 1년 안보 상황 평가

### □ 개 요

#### ○ 2017년

- IRBM과 ICBM 발사, 6차 핵실험 성공으로 北 핵무장 사실상 공식화
- 그러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으로 北 비핵화 가능성이 그 어떤 때 보다 높았던 시기

#### ○ 2018년

- ★ 文 대통령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잘못된 만남이 계속 → 北 비핵화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우리 안보만 악화 되는 치명적 실책 반복
- 판문점 선언(4.27) : 오랫동안 北이 해왔던 주장과 요구를 전부 수용
- 센토사 합의(6.12) : 판문점 선언 확인
  - \*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 韓·美동맹 균열이 본격화되는 신호탄
- 평양공동선언(9.19) : 판문점 선언 확인 수준
  -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우리 국방태세가 남북관계에 종속 변수로 전락 → 한국 국방력 약화 제도화

#### ○ 2019년

- 美·北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北 비핵화 협상은 원점 회귀, 현상 유

지 계속

- 北은 한국에게만 위협이 되는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계속
  - \* 對美 협상의 끈 유지, 韓·美 상호방위조약 균열 확인·기정사실화, 신형 미사일·방사포의 개발과 실전배치 준비
- 韓·美·日 안보협력과 韓·美 동맹은 갈수록 악화
- ▶ 소원했던 北·中·러는 가까워지고 단단했던 韓·美·日은 소원해지는 역전 현상이 가속화 → 이와 비례해 北 비핵화(FFVD) 가능성이 저하
- ※ 北 비핵화는 북핵으로 인해 北·中·러와 韓·美·日 동맹 중 누가 더 흔들리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

##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 美 대외정책 기조 변화 과정

-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 전까지 고립주의 견지
  - 1823년 먼로주의로 공식화
  -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고립주의는 일시 후퇴했으나, 전후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
-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계기로 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이후 지금까지 개입주의 기조 유지
  - \* 여건과 지역에 따라 역내균형전략(Onshore Balancing Strategy) &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신축적으로 적용

### ○ 한국은 美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 대상이 됐을 때 심각한 위기에 봉착

- ①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으로 한국·대만이 美 극동방위선(알류산열도-일본-필리핀)에 제외됨으로써 6·25 전쟁 발발
  - \*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對蘇 포위망을 만들던 미국은 유럽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힘을 절약(중국 장개석 정부 포기)

★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으로 韓·美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역내균형 전략으로 전환

②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에 이어 1977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한 카터 정부 출범

- 동맹국과 조약은 지키고 핵우산은 제공하지만, 아시아에서 월남전같은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선언(Asia 방위는 Asia에 의해!)
- 1971년 한국에서 美 7사단 철수, 1972년 美·中 상하이 공동선언, 1973년 美·월맹 평화협정
- 美·蘇 데탕트 시작, 1972년 美·蘇 SALT I

★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로 韓·美 연합군사령부 창설(1978년),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1979년)로 역내균형전략 유지

③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 진행형

-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 또는 개입을 하더라도 역외균형전략에 의거 소극적·선별적으로 하되, 관련 비용은 철저히 받겠다는 의미

○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중대

- ① 美 유권자들의 세계 경찰 역할에 대한 거부감
- ② 대외정책 수단 확대 : 기존 군사·외교적 수단 외에 통상·금융 등
- ③ 고립주의나 역외균형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해·공군력의 비약적 발전
- ④ 에너지 자립 등으로 인해 세계 경찰 역할의 필요성 축소

## □ 文 정권의 GSOMIA 연장 종료 결정, 反日·反美, 親北·親中 의도를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

### ▶ GSOMIA 연장 종료 합의

#### ○ 文 정권의 지향점이 분명히 공개된 사건

##### • 文 정권의 지향점?

- 韓·美동맹 대신 민족 공조를 선택
- 韓·美·日 자유 동맹 대신 北·中·러 전체주의 동맹을 선호

##### • GSOMIA 연장 종료 시기는 원래 계획된 수순?

- 대법원 판결과 그 후 文 정권 태도로 볼 때 원래 계획된 수순
- 시기는 앞당겨졌을 가능성 높는데 그 이유는?

① 김정은의 강력한 요구, ② 일본의 빠른 대응,

③ 국내정치적 곤경

#### ○ GSOMIA 연장 종료의 종착점은 反美

- 일본보다 미국의 반발이 훨씬 강함

### ▶ GSOMIA 연장 종료에 따른 각국의 이해와 입장

#### ○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나 文 정권은 이익이 크다고 인식

- 한국 입장 : 北核 대응 취약, 안보 핵심 Platform & System 균열
- 文 정권 입장 : 단기 總選, 중장기 聯邦制(平和經濟로 용어 혼란)

\* 조국 사태 관심 전환, 남북 평화 쇼(Again 2018)

★ 대한민국과 文 정권의 이해 셈법이 극명하게 상이

#### ○ 미국은 명확하게 반대하나 대응은 고심

- 반대 이유 : 한국 이탈은 인도·태평양 전략 난항 봉착, 대폭 수정 불가피

- 한국을 포기 or 복귀 유도(강제)? : 일단 11.23일 시한 제시
- 포기 : 전략 수정(일본 : linchpin + cornerstone), 美 Global Leadership 유지 차원에서 한국 강력 응징 예상
- 복귀 유도 : 소리 안 나고 효과 큰 수단 먼저 사용 → 자발적 복귀  
→ 美 요구 수용(韓·美·日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비 인상 등)
- 일본은 관망하며 미국 지지
- 北은 복귀 극렬 반대, 복귀 시 고강도 대남 위협 및 대결 구도 압박
- 中·러는 복귀 반대하되, 공개적으론 관망 자세

#### □ 韓美 연합훈련 사실상 중단과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韓美동맹의 실질적 보장 장치 와해

##### ▶ 韓美 연합훈련 사실상 중단

##### ○ 훈련 축소 내용

- Key Resolve 연습 : 동맹 19-1로 改稱
    -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는 생략
  - 독수리 훈련(Foal Eagle)
    - 기존 훈련 대부분 중단, 대대級 이하 훈련만 부분 시행
  - UFG(Ulchi-Freedom Guardian) 연습 : 동맹 19-2로 改稱
    - 5월에 을지·태극훈련으로 한국 정부와 軍만 참가
    - 8월에는 韓·美연합 군사연습으로 하되,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는 생략하는 대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초기 운용능력 평가(IOC) 평가로 대체
- \* 훈련 중 韓·美 간 심각한 이견이 있었음이 보도 통해 노출

：韓側, 전작권 전환 연습 vs 美側 유엔사 지휘 전시작전 연습

- 대규모 연합훈련인 쌍용훈련, Max Thunder, Vigilant Ace
  - 연합훈련은 중단하고, 韓·美 각자 단독훈련으로 대체 예상

○ 문제점 분석

- 반격연습 중단
  - 韓·美 연합방위태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인 對北 억제력 심각하게 약화(北 도발에 대한 ① 보복 의지 훼손, ② 보복능력 약화, ③ 이에 대한 北 신뢰 저하) → 평화 유지의 기본인 억제력 약화로 평화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증대
  - 전시 美 증원전력 전개·작전 능력 약화 → 결국 주한미군과 함께 韓·美 동맹 현시의 또 다른 축인 전시증원에 대한 의구심 증폭 → 동맹의 토대인 '상호 신뢰' 훼손으로 연결
  - 반격작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美 지상군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및 작전 투입이 진행돼 韓·美 間 협조, 작전 지휘·수행間 복잡한 요소가 많음 → 반격작전이 생략된 연합연습·훈련은 큰 효과와 의미가 없음
- 야외기동훈련(FTX) 중단
  - 워 게임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만 하고 實병력이 전시 임무수행을 할 실제(또는 類似)지형과 기상에서 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기 극히 제한
  - 대대級 이하 작전은 대부분 韓·美軍 각자 수행 → 연합훈련은 상위 제대로 갈수록 필요하기 때문에 대대級 이하 훈련은 군사적 효과는 없고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의미밖에 없음.
- UFG 연습 중단으로 韓·美 정부와 軍의 국가차원 연합연습 기회 全無
- 韓·美 兩軍 지휘관·참모 교체 주기, 병사 복무기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는 연합 전투력은 거의 상실될 우려

- 한국군 지휘관·참모 1~2년 만에 교체, 병은 18~20개월 복무
- 미군 역시 대부분 1~2년 만에 교체
- 개인훈련 토대 위에 제대별 팀 훈련(협동·합동·연합)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구비 가능 → 현재 훈련체제에서는 韓·美 연합작전은 물론, 양국 군 자체 작전능력마저 약화

- 韓·美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위한 기본 프레임(연합 작전계획 작성 → 연습·훈련을 통한 검증 → 작전계획 수정 보완) 붕괴

- 특히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부대 병력은 전년도 작전계획을 토대로 2~5월 KR·FE를 통해 전시 임무를 이해하고 숙달하고 8월 UFG를 통해 완성, 그 과정에서 작전계획 보완 소요를 식별해 보완

\* 전면 수정은 2년 단위로 하되, 부분 보완은 매년 시행

- ※ 연합연습·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無用論과 전시 증원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져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점 내포

#### ▶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날로 악화 불구, 조기 전환에 박차

##### ○ 전작권 전환 조건의 현재와 미래

#### ① 조건 1: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지속능력 제공

- 한국군 新 군사능력, 국방개혁 2.0, 지휘구조, 정보능력 등 모든 것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낙관 일변도 평가(서류로 대충 하겠다?)

\* RQ-4 도입 연기, 425 사업(정찰위성 5개)과 L-SAM 개발 지연 등

- 연합연습·훈련 축소되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운용능력 평가 가능? 서류 분석과 토의로 평가 가능한가?,

- 보완·지속능력이 증원 FTX 중단 → 능력 배양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증원? 서류로만 존재?

★ 반격, FTX 중단의 문제점 : 억제, 복잡한 작전지휘, 현장 실행력 취약

★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수단이 없어진 상태에서 평가 자체가 무의미 → 검증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시

② 조건 2 :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軍은 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 한국형 3축 체계(3K)는 아래 3가지 구조적 도전을 극복해야 성공
  - 지속적인 예산 투입 보장(국가 경제적 여건, 정부 의지, 국회·국민 동의)
  - 최첨단 기술 필요, 자체 개발 성공이나 해외도입 성사도 불투명
  - 현재의 北 핵·미사일 능력에 기초함으로써 향후 증가분 未반영
- 설사 개발돼도 작전 현장 평가·검증을 거친 전력화에는 상당기간 소요
- \* 무조건 성공하고 전력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전제(정치적 판단)
  - 조그만 차질에도 안보에 치명적 오류와 공백 발생이 불가피

③ 조건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 다양한 분석 가능하나, 현재 안보환경 분석과 미래 예측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객관적 안보환경 분석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재평가 필요

○ 본질적 문제 : 약한 한국군이 강한 미군 지휘?(域內 억제, 실제 시행 가능?)

※ 韓, 전쟁지휘, 항모·원잠·우주전력 등 운용 경험 無 → 美, 순순히 이양?

□ 약소지향의 국방개혁 2.0 추진, 미래 안보 수요와 한국군 능력에 심각한 공백 발생이 불가피

- 전략환경 변화 고려한 실질적인 국방역량 강화보다는 정치적 상징과 의미 더 중시(안보가 아닌 정치적 신념·이념을 위한 개혁)

- 現 정부의 국방개혁은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이 나온 이래, '09년, '12년, '14년 3번째 수정을 거친 네 번째 수정이나, 前 정부와 단절하고 오로지 盧 정부만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 '국방개혁 2.0'으로 명명함.
- \* 盧 정부가 잘 만든 국방개혁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수정하는 국방 정책을 자행했기 때문에 단절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음.
- 盧 정부의 국방개혁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정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은 비정상적 낙관일변도의 잘못된 假定에서 시작됐기 때문
  - 假定 : ① 北 위협 감소, ② 2000년대 초·중반 Goldilocks 경제가 계속돼 첨단전력 조기 확충 위한 높은 국방비 감당 가능, ③ 출산율 감소로 병역 가용자원 감소
  - 실제 결과 : ③을 제외하고는 ①·②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남.
- 이외에도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北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계속된 핵·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北의 국지도발과 핵 억제·대응능력 확충이 긴요한 과제가 되는 등 국방환경과 수요의 변화가 많았음.

#### ○ 안보환경 분석의 核인 기본전제(假定) 생략

- 盧 정부 때는 잘못됐지만, 계획 작성의 핵심인 假定이라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미래 환경 분석만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假定은 아예 생략
- 盧 정부의 잘못된 假定(北 위협 감소, 경제여건 향상)을 반복하자니 현실성이 없고 계승한다면서 다른 假定을 쓸 수도 없는 進退兩難 → 假定 자체를 아예 없애는 편법을 사용했으리라 추정

#### ○ 합리적 개혁 목표(싸워 이길 수 있는 强軍 육성) 실종

- 盧 정부까지 포함해 역대 정부, 나아가 모든 나라 국방개혁·군사혁신 목표는 미래 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임.
- 文 정부도 겉으로는 이를 목표로 천명하나 실질적으로는 弱小指向을 넘어 弱小指向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계획을 발표

### ○ 개혁 추진 원칙도 극히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결과가 예상

- 盧 정부도 당시 전문가의 반발을 우려해 先 전력증강, 後 병력·부대 감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당연히 이를 수용했음.
- 국방 분야는 단 한순간이라도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면 안 되기에 모든 나라가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특히 명백한 敵이 존재하는 우리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음.
- 文 정부는 이런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하고 先 확실한 병력·부대 감축, 전력증강을 추진할 예정
- 이는 유례없이 치명적인 실험이자, 국가안보를 冒險을 넘어 賭博의 대상으로 삼는 자해적 접근

### ○ 개혁과제 도출과정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와 相異

- 일반적인 절차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분석 → 전쟁 수행 개념 (How to fight) 및 필요한 군사 능력 도출 → 이를 구현할 軍 구조, 전투력 체계, 국방 관리, 병영 문화 등 분야별 개혁과제와 예산 소요를 염출하는 순서
- 이번엔 거꾸로 작고 약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정해 놓고 절차를 여기에 逆으로 꿰맞춤

## □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국군 무장해제를 제도한 利敵 문서

- 절대적 가치인 안보태세(自強 + 同盟)를 더 가치가 낮은 北 비핵화마저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
- 군비통제의 절차와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
  -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감시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 확인이 기본
  - \* 예)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 헬싱키, 1992년)



- 전방지역 감시 不可로 기습 허용 또는 逆으로 과도한 대응을 초래, 불필요한 충돌을 빈발해 평화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가능성 증대
- 모든 무력충돌은 완충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北의 계획적 도발 때문, 그런데 兩비론적 입장과 北 주장(韓美에 책임 전가)에 동조한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
  - \* 北 정권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합의는 無의미
  - \* 역사적 경험(6.25, 1.21, 연평해전, 연평도 도발, 테러 등)을 무시
- 수도권 안전에 결정적 공백 발생
  - 북방한계선(NLL) 無實化, 새로운 경계선 설정 불가피
  - 북방한계선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北에게 유리한 결과 초래
    - 아군은 열세한 해병대 전력을 우세한 해·공군과 합동작전으로 보충하는데 이번 합의로 합동작전체계 뿌리째 훼손
    - 4군단 방사포, 대함미사일(실크윙 등) 운용에 전혀 지장 無
  - 서북 5개 도서 방어력 심대하게 약화, 유사시 北 기습강점에 취약
  - 수도권 서측방 상시 北 위협에 노출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까지 시행된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평시 적절한 감시가 안되면 北 도발시 한강을 이용 서울 시내까지 직접 접근 가능
    - 국방부에서 제시한 그림에는 덕적도 이동지역이 평화수역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는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만약 인천과 평택수로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 및 서해상 안보 공백은 치명적
  - 황해도 일대 敵 4군단 전력 서부전선으로 이동 가능, 이 경우 개성 - 문산 축선 압력 加重
- 비행금지구역 합의로 北 量的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軍의 質的 우위의

### 핵심수단인 ‘정보감시 + 정밀타격’ 전력 무력화

- 北 정보력(신호+인간+공개정보)은 영향 없고 我 정보력(신호+영상) 中 가 있는 영상정보력만 훼손
- 수도권 목표로 전개한 北 주력 감시와 실시간 표적 정보 획득 제한
- 北에 대한 감시 공백 발생 → 도발징후 파악이 어려워 도발 시 기습 허용, 我 대량피해 및 즉각 대응 곤란
  - \* 현장에서 아군 즉각 대응 못 할 경우, 政務的 판단 개입으로 대응 및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 상존
- 평소 감시를 안 해도 유사시 할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
  - 평소 감시가 안 되면 도발징후 자체를 식별하기 곤란
  - 정보 추적·관리가 안 되면 그동안 변화요소(적 배치, 지형 변화 등)로 유사시 적시 적절한 정보제공 곤란
- 연합 훈련과 자체 대규모 훈련이 사실상 중지되고, 전선 지역 北 도발 대비훈련마저 제한 : 가뜰이나 복무기간 단축된 현장 장병들의 조건반사적 즉각 조치능력이 현저히 약화
- JSA·GP 철수는 산술적 동수로 폐쇄해, 앞으로 이런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아군이 DMZ 주도권 상실
- 韓·美 연합방위력 形骸化
  - 연합 정보생산, 연합 훈련, 연합 작전계획 발전에 심대한 장애
  -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전시 정상적인 연합작전이 곤란

발제문 3

# 평양공동선언 1년 국내상황 평가

ㅣ 유 동 열 ㅣ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발제문 3

## 평양공동선언 1년 국내상황 평가

### I

#### 문제제기 : 실종된 평양공동선언

오는 9월 19일은 이른바 평양공동선언(9.19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판문점선언(2018.4.27.)에 이어 평양공동선언(2018.9.19.)이 채택되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평화 등에 환호하며 마치 남북한 간에 대립과 갈등, 반목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는 양 들떠 있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 비핵화)는 이행되지 않고 실종된 지 오래이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하노이회담)이 결렬되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판문점 선언」(2018.4.27.)과 싱가포르 성명(2018.6.12.) 및 평양 공동선언(2018.9.19.)에 환호하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평양공동선언 중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제1조(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와 제5조(비핵화)를 중심으로 동 선언의 이행상태를 분석하고, 동 선언이 국내에 사회적으로 미친 폐해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굴절된 남북관계나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Ⅱ

##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상황 평가

평양공동선언(9.19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6개 조항 중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합의는 제1조와 제5조이다. 이를 중심으로 동 선언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점검해 보겠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조는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 근본적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조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 선언이 마치 남북관계의 바이블(Bible)이나 되는 양 GP(전방관측소)를 즉각 해체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이행하는 흉내만 내다가 아예 올 2월 이후에는 아예 이행하기는 커녕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이른바 신형 첨단전술무기(2018.11.16.), 신형 전술유도무기(2019.4.17.), 전술미사일(5.4, 5.9, 7.25, 8.6), 신형 방사포(7.31, 8.2),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8.10, 8.16), 초대형 방사포(8.24) 발사 실험을 지속 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의 안보리결의안(2270호, 2094호, 1874호, 1718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 하의나 경고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북한은 간첩을 남파하는 등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안보수사당국은 지난 6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직과간첩 박모를 검거한 바 있다. 당국은 북한을 의식했는지 간첩을 검거하고도 쉬쉬쉬하며 보안을 유지하다,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간첩 검거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문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이행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북한에게 당당하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 군사합의서〉에 위배되는 간첩 침투활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강력 요구해야 할 사안이나 무엇이 두려운지 침묵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2조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조항이다. 문정권이 열심히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나, 작년 12월 26일 개성 관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후 북한측의 불성의로 개통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14-40조 규모)를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이 남북경제협력이지 실제로는 일방적인 우리 정부의 대북경제지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제4조의 남북교류 합의사항 중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만이 성사되었다. 이 행사는 2018년 10.4-6일 평양에서 ‘민족통일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된바 있는데, 한국측에서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 160명이 방북을 했다. 북한측 입장에서는 대남 통일전선 구축의 합법적 장(場)을 열기 위한 기회인데, 거부할 필요가 없었기에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과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는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특히 북한이 3.1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안



다면 3.1절 남북 공동기념 행사가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추진했다는 것은 북한의 역사관에 대해 무지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3.1 운동과 같은 혁명투쟁은 “탁월한 수령의 영도와 혁명적 당의 지도가 없이는 어떤 혁명운동 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3.1운동을 부르조아지 민족주의운동으로 규정하고, 부르조아지들의 무저항주의적이고 투항주의적인 입장과 사대주의적 외세의존의 방법으로 독립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3.1운동 지도세력을 사대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3.1운동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자는데, 북한이 여기에 동의할리 만무한 것이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제5항은 비핵화에 관한 합의이나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동 선언에서는 관문점선언(2018.4.27.)에서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반복했으나 실질적 진전이라고 표현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도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29일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2019년 2월 복구에 착수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을 일부 철거한 것은 ‘쇼’였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는 커녕 도리어 복구한 것이다.

필자는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관련 국회정책토론회 발제와 기고 등을 통해, 동 선언의 5항은 “미래의 핵에 대한 언급이지 과거, 현재의 핵폐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반비핵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가 입수한 자료(2018년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 발행, 군 장성과 장교 대상 강습자료)에 의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김정은이 “핵 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북한의 핵 무력을 공고히 하고 핵 전력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핵화 선언이 거짓이며 위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문정부는 평양공동선언 직후 김정은의 방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제안(2018.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2019. 3.1행사 등)했으나, 북한이 거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의 서울답방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당국의 성명 및 언론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문정권이 북한에 의해 조롱과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있다. 지난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했다. 연이어 8월 16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면 문정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조선 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결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것을 그대로 줄줄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쪽에서 산양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력설하는 모습을 보면 겉에 잔뜩 질린것이 력력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것이 좋을 것이다.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평양공동선언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 Ⅲ

### 평양공동선언의 국가사회적 폐해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대해 미화, 찬양하는 분위기를 우리 내부에 확산시켜 결국 반문명적인 폭압정권인 김정은과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결국 긍정시하고 정당화 했다.

문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그동안 수차례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의 압권은 작년 9월 19일 평양선언을 마치고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 문대통령의 연설이다. 당시 문대통령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한 후, 김정은 소개로 평양 시민 앞에서 7분간 연설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두에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

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본인을 ‘남쪽 대통령’으로 호칭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한 사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이나 이를 도외시한다.

또한 “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  
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며 김정은과 이른바 주체 영도  
력을 찬양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이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200여명에 달하는 당·군·정 간부들과 주민들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반인륜적 폭압통치자이자,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배후에서 지휘한 범죄자이다. 또한 북한이 자행한 총 6차례의 핵실험 중 4차례를 단행한 국제범죄자이다. 이런 자가 문대통령에 의해 갑자기 우리 및 국제사회에 ‘평화의 사도’,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하여 등장한 것이다.

문정권은 북한 김정은과 수령폭압체제 북한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을 단순히 대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한 대북전략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대화를 해도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한 대북전략의 수준을 결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대남적화공작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결국 반문명적인 김씨집단을 공고화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북한 핵폐기와 평화에 대한 헛된 기대와 환상을 심화시켰다. 남북대화나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는 민족생존권과 한반도 및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북한핵의 폐기이다. 그러나 북핵폐기는 물건너가고 북핵동결로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진영과 서방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이는 2016년 7월 6일 북한당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북한의 북핵폐기나 북한이 비핵화란 용어를 피하면서 한반도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양선언에서金正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길이 분명해졌다.金正은은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쇼도 그래서 한 것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주장이 뒷받침 해준다.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金正은의 조치에 만족하며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은 유지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며 북핵폐기를 몽갓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진짜 의지만 있다면 비핵화를 1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의회(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북한은 다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 하의 이른바 최고존엄(수령)인金正은이 핵을 없애는 게 내 방침이라고 선언하고 핵무기를 없애라고 지시하면 1개월도 안 걸린다. 한 달이면 가능한 일인데 2년을 언급하다가 대북특사단에게 트럼프 임기 내(2022년 1월)를 비핵화 운운하며 3년이 넘게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 절차와 과정(핵신고, 사찰, 폐기, 검

중) 등을 이야기하며 질질 끄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여기에 환호는 트럼프와 문재인 및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환상만 심어준 꼴이 되어버렸다.

**셋째, 국민들에게 대북경계심 등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정은과 북한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릇된 환상은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 의식과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반면, 감상적 평화의식과 ‘연공연북, 민족공조, 친북의식’ 확산시키고 있다. 현실정에서 남북당국의 대화국면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 수구꼴통세력으로 매도 당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김정은 서울답방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들의 조직화되어 발호하는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 내부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숭모하는 ‘집단적 마취’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넷째,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수사기관(중앙기관)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의 보안국 및 보안수사대, 안보지원사(구 기무사)의 방첩처 외에 공안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공안부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시 되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며 무력화되고 있는데, 남북 위장 평화선언인 평양공동선언 등도 일조하고 있다.

문정부는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놔는데, 핵심 내용은 대공수사권의 폐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제1의 임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막아낼 대공수사 업무가 최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대상인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마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개혁의 원흉인 양 규정하고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임 원장과 간부들이 적폐수사로 사법처리되고 대공수사요원들이 자체 적

폐청산 감찰부서에 불러 다니며 조사받는 상황에서 간첩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보이지 않은 거대한 손(?)’이 지배하고 있다. 사기를 먹고사는 안보 수사요원들이 정체성(identity)의 위기에 직면해 버린 것이다. 국정원 개혁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문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바로 이를 노리고 ‘대공수사권 폐지’카드를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문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는데, 경찰은 기존의 보안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며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역행하여 보안경찰 인력과 부서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79명으로 101명을 대폭 감축했다. 엄청난 규모이다. 보안상 다 밝힐 수 없지만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으로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국 27개의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매도하고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토록 결정했다. 보안수사대의 분실(별관) 운용은 안보수사의 고도의 보안 유지 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것인데, 문정부를 이를 도외시키고 안보수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는 조치와 다름없다. 또한 상당수 경찰서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3대 안보수사기관 중 가장 초도화되어 버린 기관이 구 기무사이다. 작년 7월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대비문건이 군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되자 기다렸다는지 문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쿠데타 음모, 내란음모 등으로 마녀사냥식 공세를 펼쳤다. 특히 국방부와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기무사를 해체한 다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인력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축소시켜 버렸고,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한 방첩처는 직격탄을 맞아 버렸다. 문제가 된 계엄대비문건을 방첩처가 주관하여 작성하는 바람에 방첩기능이 좌악시 되고 방첩요원들이 대거 일반 부대로 원복되는 바람에 간첩 검거 등 군의 안보수사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지경에 이르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방첩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십년 축적된 방첩 수사역량이 와해되는 것을 자명한 일이다. 프로는 사라지고 아마추어들이 방첩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전직 기무사 방첩요원의 지적이 빈말은 아닌 것 같다. 작

년 11월 7일 발표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내란예비, 음모 등의 혐의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한 것이 전부였다. 김정은과 정찰총국이 환영할 일을 문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公安부에서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사건 지휘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안보수사지휘에 소극적이다. 경찰 등이 지휘신청을 해도 묵묵부답이며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실태가 일반화되어 버렸다. 특히 안보수사지휘에 주력해야 할公安검사들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안보수사기관의 인력, 조직 및 예산의 감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수사요원들의 정체성(identity) 위기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도리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걸림돌과 인권탄압,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부서로 매도되는 시각이다.

다섯째, 간첩을 잡는 것이 역적(逆賊)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로 올 6월 말 북한의 직과 간첩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간첩 검거보도가 나간 이후에 안보수사 당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어야 하나 묵묵부답이다. 도리어 누가 이를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간첩 검거자들에 대해 격려 및 포상 등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는 커녕 도리어 죄인(?)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마치 간첩을 잡으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인 양 치부되는 분위기 하에서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헌신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

여섯째, 군의 대적관(對敵觀)이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국군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나 북한군 실체를 파악하는 대남전략 및 군사전략, 지휘체계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위장 평화론을 수용하여 군의 대적관에 혼선을 주고 결과적으로 군 역량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통일교육교재에서 북한의 도발사례, 북한의 인권 탄압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일곱째, 북한 추종 종북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자유애국진영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이른바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내부에는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감상적 민족공조주의와 통일지상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나 집단 및 인사들이 존재한다. 북한과 문정권의 이른바 (위장) 평화 연출행보는 종북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반면, 신중한 접근이나 이를 반대하는 자유애국진영(일명 보수세력)을 반통일세력 및 반평화세력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른바 종북세력의 발호는 제2, 제3의 종북세력의 출현을 가속화시켜 이들의 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반면, 정통 자유민주세력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및 체제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기관 및 대공기능의 무력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내부의 이른바 남남갈등이란 본질에 있어서는 남북(남한-북한) 갈등이다. 우리 내부에서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은 외피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족적인 북한 김씨정권을 정당화하는 이적세력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종북세력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율성이 없다. 겉으로는 한국의 자주화, 민주화 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상전인 북한 김정은에게 맹종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는 길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다양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이자 우월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핵폐기나 대남적화혁명노선 폐기 등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수반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종북세력 등이 발호하는 상황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여덟째,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정권의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등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격 훼손 등을 가져오고 있다.

## IV

## 제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일련의 대북정책을 조명해보면, 1단계 북한 자극하지 않기 정책 → 2단계 북한 눈치보기 정책 → 3단계 북한 비위맞추기 정책 → 4단계 북한 받들어 모시기 정책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문정권의 끊임없는 김정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양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는 커녕 이를 위반하는 북한, 전술 탄도미사일, 신형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하는 등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북한, 북한을 신뢰하는 문정권을 악성 비방하며 조롱, 협박하는데도 북한 김정은에게 제대로 항의나 경고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격은 어디에 있는지 처참한 실정이다. 그것도 헌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을 상대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국문명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문정권의 의도대로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핵을 폐기하고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지난 70년간의 남북관계를 조망해보면 이는 ‘허황된 희망사항’임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북한 김씨집단을 신뢰하려면 아래와 같은 ‘전략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래 사항이 실천되지 않는 한 북한 김씨집단을 신뢰하면 안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과 제7차 당대회 총화결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을 폐기하여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표〉 조선노동당 규약의 수정

1980.10.10. 제6차대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b>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b> 전국적 범위에서 <b>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b> 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b>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b> 를 건설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2010.9.28. 제3차 당대표자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b>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b> , 전국적 범위에서 <b>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b>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b>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b> 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2012.4.11. 제4차 당대표자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b>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b> , 전국적 범위에서 <b>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b>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b>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b> 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2016. 5.8. 제7차 당대회 (김정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b>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b> , 전국적 범위에서 <b>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b>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b>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b> 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규약 서문을 보면, 당이 지향해야 할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실현’부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으로 변경한 부분이다. 이를 놓고 북한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공산주의실현과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성급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 〈철학사전〉(1985년판)과 〈주체사상 총서5권〉(1985년판)에 명시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산주의 삭제 표현이 위장 사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된 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표현임이 북한 철학사전(1985)과 주체사상총서 5권(1985) 책자에서 확인된다.<sup>1)</sup>

1) 유동열,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남전략”, 2010년 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10.11.24., 43면.

또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수정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화’로 명시하여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여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체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아래 인용문과 같이 ‘당의 최고강령’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 당대회 결정문>(2016.5.8) 제3편(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잘 집약되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sup>2)</sup>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 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⑤ 이를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빼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둘째, 128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왜 백만 대군인가? 북한은 상비전력으로 지상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 등 총 128만여 명인데, 이는 한국군 63만 명의 2배 규모이다. 또 한 예비전력으로 교도대 65만명, 노농적위군 570만명, 붉은 청년근위대 100만명, 준군사부대 32만명 등 762만 명을 운용하고 있다.<sup>3)</sup> 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2)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침인 ▲ 조국통일 3대 원칙(1974)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 방문 시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997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이며,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일명 8.4노작)라는 논문에서 이를 재삼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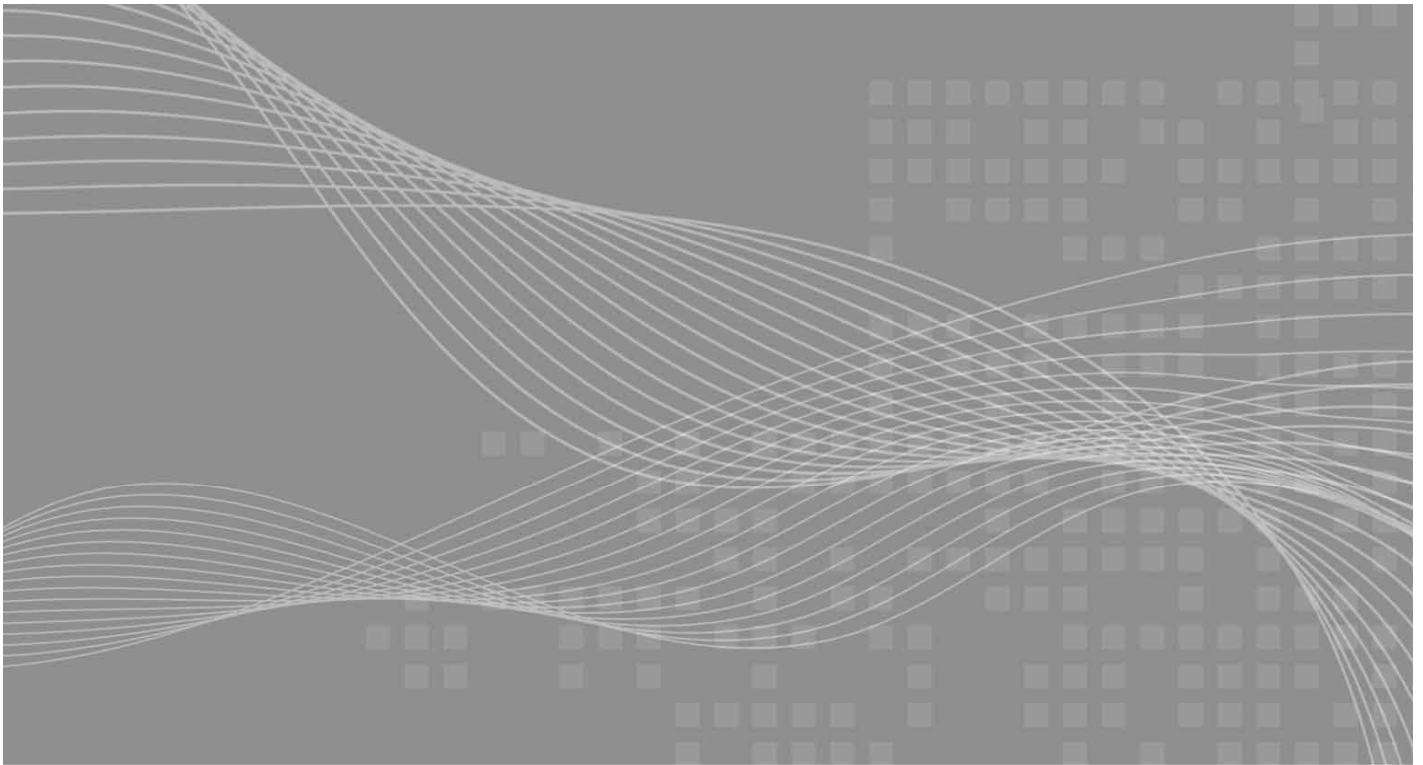
3)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2016, 27면.

셋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생학무기(2,500-5,000 톤 규모) 등 전쟁무기 즉 평화파괴무기가 사라져야 한다.

넷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인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 등 간첩공작 부서들과 대남테러를 전담하는 비정규 특수병력(11군단 등)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은 6.25 남침 도발 등 수만건의 대남도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대립과 갈등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화해’나 ‘평화’ 운운은 사기에 다름 아니다.





# 부 록

- 부록 1. 평양공동선언(2018.9.19)
- 부록 2. 판문점선언 (2018.4.27)





## 부록 1. 평양공동선언(2018.9.19)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부록 2. 판문점선언 (2018.4.27)

### 평양공동선언 (2018.9.19.)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 자유민주연구원 소개([www.kild.or.kr](http://www.kild.or.kr))

자유민주연구원은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3일 설립되었으며, 국세기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2014년 3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 자유민주연구원 조직과 사람들

### ▶ 명예 고문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대표,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이동복(전 국회의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상연(전 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정기승(변호사,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 ▶ 고 문

고영주(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김박(민초장학재단 이사장), 김규석(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전 통일원 차관),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태훈(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광작(전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박정이(예비역 육군대장, 전 1군 사령관),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주영(전 건국대 부총장),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전정환(북한연구소 이사장, 전 국방대학원 교수), 정순영(세종대 석좌교수, 전 부산동명대 총장)

### ▶ 해외지역 고문

강필원(한미자유연맹 이사장, 자유민주연구원 워싱턴D.C. 대표), 민경원(미주애국연대 의장, 자유민주연구원 뉴욕 대표), Moony Chang(한미동맹협의회 회장, 미국), 양재운(재미국회동우회 회장, 자유민주연구원 L.A. 대표), 이경복(국제구국연대 공동대표, 자유민주연구원 캐나다 대표), 주성배(가든스테이트오페라단 단장, 자유민주연구원 뉴저지 대표)

### ▶ 원 장 유동열

### ▶ 정책자문위원

임정혁(정책자문위원장, 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전 서강대 부총장), 김용석(전 국방대학원 교수),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신원식(고려대 연구교수, 전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중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기덕(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 한국국가정보학회장), 이문재(변호사, 전 대전지검 차장 검사),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경북경찰청장), 이봉엽(예비역 육군소장, 전 기무사 참모장), 이용준(전 외교부 차관보, 이탈리아 대사), 전경만(전 한국국가정보학회장,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전장수(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한국캠퍼스 전임교수), 조용연(전 경찰청 보안국장, 충남경찰청장), 최경식(전 경찰청 교통국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 ▶ 정책연구위원 헌법보호연구실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학장),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호성(변호사),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자하(전 서울방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구영(연구위원)

### ▶ 정책연구위원 - 국가정체성연구실

강규형(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김진술(북앤피플 대표), 송상근(성균관대 초빙교수, 전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유광호(자유민주연구학회장, 전 한국전략연구소장),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원재(방송인, 전 숭실대 교수)

### ▶ 정책연구위원 - 통일북한연구실

고성호(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김정봉(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서정순(전 합참 정보본부 과장, 예비역 대령), 선명균(정책연구원), 양일국(정책연구위원), 이석진(정책연구위원), 이윤진(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철(상지대 교수), 정병윤(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최문홍(정책연구위원), 최봉수(전 단국대 교수), 황운덕(전 국정원 단장)

### ▶ 정책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구대회(전 국정원 단장), 김재권(전 경찰대 교수),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노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춘식(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성시웅(변호사, 전 부천시청장,

대검 공안연구관), 윤봉한(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덕기(전 기무사 방첩단장), 임재범(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정준현(단국대 법대 교수), 정찬 권위기관리학 회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허태회(선문대 교수, 전 국정원 전문위원)

#### ▶ 자유민주연구원 행정실

#### ▶ 자유민주연구원 해외 대표부

미국 워싱턴 D.C. 대표 : 강필원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미국 뉴욕 대표 : 민경원 (미주애국연대 의장)

미국 뉴저지 대표 : 주성배 (가든스테이트오페라단 단장)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표 : 양재윤(재미국회동우회장), 김경희 (간사)

캐나다 대표 :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공동대표)

유럽 대표 : 김상록(전 재향군인회 영국지회장)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